평양 三崇의 신사참배 거부투쟁과 폐교

김승태*

Ⅰ. 머리말
Ⅱ.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
Ⅲ. 평양 3숭 학교장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
Ⅳ.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교육선교 철수 결의와 3숭의 폐교
Ⅴ. 한국인들의 반응과 3숭 인수운동
Ⅵ. 맺음말

Ⅰ. 머리말

평양 3숭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평양에 설립하여 운영하던 고등교육 기관인 숭실전문학교, 중등교육 기관인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배어드(W. M. Baird, 裵偉良)가 북장로회 선교본부의 허가를 받아 1897년 10월 설립한 숭실학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학당은 1900년 정규 중학교로 발전하였고, 그 첫 졸업생을 배출한 1904년에 대학부를 설치하여 1905년부터 대학과정을 교육하였다. 1906년 8월에 선교본부로부터 숭실학교 내에 대학부 설치의 허가가 났고, 같이 평양에서 선교하던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에서도 대학부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합성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일제의 교육정책 때문에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1925년 숭실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숭의여학교도 1897년 평양 주재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리(Graham. Lee, 李吉咸)의 사택에서 시작한 여소학교에서 태동하여, 그 졸업생에게 중등교육을 할 목적으로 1903년 10월 북장로회 선교사 마펫(S. A. Moffett, 馬布三悅)이 선교부 소속으로 설립 운영하였다. 이들 세 학교는 평양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서 깊은 기독교계 학교로 알려져 있었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서 일제의 집요한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싸우다가 결국은 1938년 3월 3숭 모두 폐교하는 비운을 맞았다.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일제가 메이지유신 이래 국가주의교육을 통하여 자국 국민에게 주입하였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한국병탄 이후 식민지 교육정책의 핵심이었던 "동화(同化)=일본화(日本化)=충량화(忠良化)" 정책을 기독교학교에도 강요·관철시키려던 구체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 목적으로 경영하던 기독교계 학교에는 자신들의 목적이나 신앙과 교리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고는 응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이었다. 더욱이 그것은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을 통해서 이루려다가 3·1운동의 발발로 실패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지배·장악을 위한 재시도이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일제가 기독교계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3숭 폐교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1935년 11월에 일어난 3숭 학교장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의 전말을 다룬 다음, 폐교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과 3숭 인계 운동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일제가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한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선교사들이 그들이 경영하던 기독교 학교의 폐교와 교육선교 철수를 통해 기대한 효과는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기대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만약에 그 기대한 효과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3숭 폐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과 3숭 인계 운동의 논리와 주장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

일제는 러일전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1905년 11월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식민지배의 기초를 닦기 시작하여, 1910년 8월 강제로 한국을 병탄하고, 한국인들에게도 가혹한 식민지교육과 관제 사회교화 기구를 통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훈련으로서 식민지배 초기부터 신사의 설립을 장려하고 관공립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1925년에는 총독부에서 1912년부터 계획 추진하던 조선신궁을 남산 중턱에 건립하고, 경찰과 관리들을 동원하여 학생들에게 그 참배를 강요하고자 하였으나 기독교계와 한국인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관철할 수 없었다.[1)]

1930년대에 들어 일제는 다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서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1931년 9월 관동군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침략을 재개한 일제는 물심양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신도의식 내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1930년대에 기독교계 학교가 이러한 행사 참여를 거부하여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1932년 1월경 전남 광주지역에서였다. 일본인이 일본어로 발행하던 「목포신보(木浦新報)」는 광주발 기사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 광주에 있는 기독교 신자를 주체로 하는 某사립보통학교, 某사립여학교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만주사변에 대한 기원제에 참가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종류의 회합에 참가하더라도 신사에 참배

1) 김승태, "일본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신사문제'," 「한국사론」16(서울대 국사학과, 1987) 참조.

> 하지 않아서 도 학무당국에서는 머지않아 엄중하게 주의를 주어 그래도 종래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나올 것이라고 한다.[2)]

물론 여기서 모사립보통학교와 모사립여학교는 남장로회에서 경영하던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일 것이다. 같은 해 9월 18일에 평양에서도 숭실전문학교를 비롯한 10개의 기독교계 학교가 평안남도 지사의 공식 통첩을 무시하고 이른바 "만주사변 1주년 기념 전몰자 위령제"에 불참하여 문제가 되었다.[3)] 이 때 이미 도 당국에서는 총독부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에 대해서 시말서를 쓰게 하였으며, 그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단연 폐교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계통의 학교장인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기 위해 외사과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933년 9월 18일 원산에서도 캐나다장로회 소속 진성여자보통학교(교장 Mrs. R. W. Barker)가 "만주사변 2주년 기념일"에 거행된 "순난자(殉難者) 위령제(慰靈祭)"에 도 당국의 통첩을 무시하고 참석을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다.[4)] 이와 같이 이 시기에 전국에 걸쳐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가 자주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륙침략의 재개를 계기로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정신교화' 운동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일제가 1930년대에 들어서 기독교계 학교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앞에서 서술한 시대적 상황과 함께 식민지 교육정책을 기독교계 학교에서도

---

2) 「木浦新報」1932년 1월 14일자, "皇軍에 대한 祈願祭에 참가하지 않은 광주의 기독교 학교, 當局, 단호한 處置로 나올 것이다."

3) 「大坂每日新聞」(朝鮮版) 1932년 11월 9일자, "崇實校를 비롯한 10校에 始末書 如何로 斷然 폐교처분, 전몰자 위령제에 불참배, 기독교계 학교의 奇怪事"; 같은 신문 12일자, "기독교계 학교의 전몰자 위령제 불참배 문제, 훈령에 거슬리면 단호하게 처분, 평남 도당국에 보고를 명하다. 총독부 결연하게 임하다."; 「每日申報」1932년 11월 11일자, "平壤府內 私立 10校 慰靈祭場에 不參, 당국의 공식 통첩을 무시하고, 調査되는대로 處斷."

4) 「朝鮮新聞」1933년 9월 27일자, "眞誠女子普通學校가 慰靈祭 參列을 拒否하다. 當局의 慫慂을 물리친 頑迷한 校長에게 非難이 일다."

관철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 폐교하여 식민지 교육체제 내에 편입하려는 뚜렷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조선인 지원병 제도의 채용을 앞두고 1937년 12월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마련하여 오노 정무총감과 미나미 총독에게까지 보고된 다음과 같은 기밀 자료는[5] 그러한 식민지 교육의 내용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 조선에서 교육에 관한 방책
>
> 1. 조선에서 교육의 本旨는 一視同仁의 聖旨에 기초하여 교육에 관한 勅語의 취지를 遵奉함으로써 忠良한 皇國臣民을 育成하는 데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서는 時勢와 民度를 잘 성찰하여 그것에 卽應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조선에서 금후의 교육의 실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을 들면 (1) 皇道主義 (2) 內鮮一體 즉 同化 (3) 忍苦鍛練의 세 가지 점에 귀착한다. 전에 皇國臣民의 誓詞를 제정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 낭송시키고 또 皇國臣民 體操를 創定하여 항상 이를 실시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필경 위 세 가지 점을 형식으로부터 정신으로 浸潤하게 하고자 하는 방도에 불과하다.[6]

여기서 말하는 '황국신민의 서사'나 '황국신민 체조'와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도 "형식으로부터 정신으로 침륜(浸潤)하게 하고자 하는 방도"로 강요한 것이었다. 여기서 '황도주의(皇道主義)'는 이듬해인 1938년 3월 미나미 총독이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령할 때에는 '국체명징(國體明徵)'으로 바뀌지만 결국은 용어만 다를 뿐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7]

결국 이러한 교육 방침에 의한 신사참배 강요로 선교사들은 결국 교육선

---

5) 이 자료는 미나미 총독이 직접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내각을 설득하여 '조선인지원병제도'를 채용하게 하는 데 이용되었다(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00-204)

6) 大野綠一郎 文書, "(秘) "朝鮮에서 敎育에 관한 方策", 1937. 12.

7)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1938년 3월 4일자, "諭告", 이 유고는 미나미 총독의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와 "개정(3차) 조선교육령" 공포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그는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鍛鍊"을 3대 교육방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를 포기하고 기독교계 학교들은 1937년부터 1939년 사이에 거의 모두가 폐교되거나 일제의 관공립학교로 흡수되게 되는데, 이 시기 이러한 영향을 받은 학교들과 학생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먼저 1930년에 보도된 「경성일보(京城日報)」의 기사는 종교계 사립학교 가운데서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보여준다.

> 조선인 자제를 수용한 종교관계의 사립학교는 본년(1930년) 5월말 조사에 의하면 277교에 이르는데, 그 중 조선인이 설립한 것은 불교 관계 8교, 기독교 관계 1교 계 9교로 다른 268교는 전부 외국인이 설립한 것이다. 그 교파별로는 미국인이 관계된 것이 거의 전부로 그 가운데 장로파 107교, 북감리교회 41교, 남장로교회 17교로 도별로 보면, 평남이 69교로 가장 많고, 평북 33교, 경기 25교, 황해 23교 순으로 다른 데는 10교 내외이다.[8]

물론 이것은 학교 설립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냈으므로 그 당시에 이 모두를 선교부에서 직접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국인들이 경영하던 초등학교들까지 포함된 통계로 보인다.[9] 1930년대 장로회 선교부가 직접 운영하였던 사립학교들의 통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장로회 선교부 소속 사립학교 통계(1930-1940)

연 도	전 문		고 등(중)		보 통(소)		비 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1930	1	133	18	2,583	16	3,373	
1931	1	159	22	3,185	16	3,128	
1932	2	268	23	3,911	66	6,669	

8) 「京城日報」1930년 12월 18일자, "朝鮮人 子弟 收容의 宗教關係 私學校, 內容 改善이 必要하다."
9) 정확한 통계로는 볼 수 없지만, 숭실학교가 폐교된 직후 북장로회 선교부의 교육선교 철수를 언급하면서 「東亞日報」1938년 6월 4일자에서도 "引退될 北長老教 學校 中等 15, 初等 110餘校, 講習, 幼稚園 除外코 2萬生徒"가 영향을 받게 되어 "教育界의 損失이 莫大"하다고 보도하여 선교부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초등학교들도 그 영향권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1933	1	171	19	3,531	15	4,045	
1934	1	200	14	3,372	13	3,422	
1935	1	202	17	3,016	14	4,166	
1936	1	139	18	5,049	18	5,702	
1937	1	120	18	4,492	16	5,494	
1938	0	0	9	2,871	4	1,477	숭전 폐교
1939	0	0	8	2,598	6	1,904	
1940	0	0	0	0	0	0	선교 철수

* 출전: 각년도『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통계표(각 연도 5월말 현재)에서 정리.
* 비고: 여기에는 남장로회·북장로회·캐나다장로회·호주장로회가 경영하던 학교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인이 경영하는 소학교나 야학교 등은 제외되었다.

이 통계는 신사참배 문제로 남·북 장로회 선교부가 학교 폐교와 교육선교에서 철수를 결의한 1936년 이후 급격히 학교와 학생수가 줄어들어, 1940년에는 완전히 교육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사들이 철수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Ⅲ. 평양 3숭 학교장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

1935년도 초부터 일본에서는 군부 황도주의자들에 의해 미노베[美濃部達吉]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이 국체에 위배된다고 공격을 받아 정죄되고 이른바 '국체명징(國體明徵)' 운동이 일어났다. 조선총독부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심전개발(心田開發)' 운동과 함께 '국체명징'을 부르짖고 '신사참배(神社參拜)'와 '경신사상(敬神思想)'을 강조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935년 11월 14일 평양에서 기독교계 학교의 교장들이 평안남도 지사의 지시를 어기고 평양신사에 참배하기를 거부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앞에서 서술한 1930년대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 사건들과 그 본질적인 성격은 같은 것이었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직접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가 경고만이 아닌 강경책을 쓰기 시작한 분수령이 된 사

건이었다.

이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평남지사 야스타케 다다오[安武直夫]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도쿄대 독법과를 나와 관계에 진출한 식민지 관료로 "내외지 관계에 출입하여 수완을 숙달한 사람으로 내외지 통치자로서의 수완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10] 그는 1920년대 초 이미 조선총독부 사무관을 지낸 적이 있었으며, 평남지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1932년부터 대만총독부 문교국장을 지내면서 "그 땅에 교육의 개선과 충실을 위해 시설한 바가 많았다"고 한다.[11] 즉 일제 식민지 대만의 식민지 교육에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1935년 1월 다시 조선에 건너와 바로 평안남도 도지사를 맡았는데, 그의 경력을 살려 식민지 교육과 '사회교화'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실행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특히 당시 총독부 방침이던 "실업보습교육, 중견청년양성, 졸업생 지도 등 농촌교육, 농촌진흥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12]

이러한 그가 기독교계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리 없었다. 기독교계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을 맡은 학교 교장들이 솔선하여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기독교계 학교 교장들을 먼저 굴복시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35년 초부터 조선총독부의 '정신교화' 운동이 '심전개발' 운동으로 심화되고,[13] 1935년 4월에는 우가키 총독이 각 도지사와 관공사립학교장들에게 훈령을 보내 "지금 내외의 정세를 생각건대 각하(刻下)의 급무(急務)는 일본정신(日本精神)을 작흥(作興)하고 국민적 교양의 완성을 기하여…존엄한 국체(國體)의 본의(本義)를 명징(明徵)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의 쇄신과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니 힘써 그 임무를 달성하라고 지시하였

10) 阿部勳 編,『朝鮮功勞者銘鑑』, 民衆論社, 1935, 44.
11) 위와 같음.
12) 위와 같음.
13) '심전개발' 운동에 대해서는 韓亘熙, "1935-37年 日帝의 '心田開發'정책과 그 성격,"「韓國史論」35(서울대 국사학과, 1996) 참조.

다.[14] 이어 5월에는 정무총감도 각 도지사에게 "학교에서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염(念) 함양(涵養) 시설(施設)에 관(關)한 건(件)"이라는 통첩을 하여 학교교육에서 "경신숭조"라는 신도(神道) 내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위한 가미다나[神棚]의 설치를 독려하였다.[15]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도 총독부 학무국장이 각 도의 도지사에게 "학교 직원의 경신사상(敬神思想) 철저(徹底)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내려보내 학교 직원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도록 독려하였다.

> 무릇 건전한 국민교육의 興隆은 한결같이 師表인 자의 국민적 신념에 의존하는 바가 가장 크며, 이 根幹을 이루는 것은 실로 國體觀念의 明徵과 敬神崇祖 精神의 體現이라고 하는 職으로 敎育에 있는 자는 이미 각 가정에서 가미다나[神棚]를 奉安하여 그 실행을 期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시 국가 내외 비상의 시기를 맞이하여 모든 직원이 일치하여 한 사람의 게으름도 없이 솔선하여 모범을 민중에게 보이는 것은 그 영향을 끼치는 바가 극히 클 것이라고 믿으므로, 이 때에 한층 이것의 철저를 期하도록 하기 바란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소재지의 神社 또는 神祠를 중심으로 生徒 兒童들에 대하여 敬神 思想을 함양하기에 노력해야 하며, 혹은 神社 神祠가 없는 지방도 있을 것이니, 이 경우에는 주변 실정을 잘 勘案하여 校內의 淸淨한 곳에 大麻의 奉祀殿을 설치하는 등 적당한 방도를 강구하여 生徒 兒童의 敎養에 도움을 주게 考慮하도록 하기 위하여 通牒함.[16]

더욱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체명징에 관한 성명'과 "국체의 본의 명징에 관한 성명"도 정무총감 이름의 관통첩으로 중앙과 지방의 각 부서장에게 1935년 8월 10일자 "국체명징에 관한 건"과 같은 해 10월 25일자 "국체의 본의 명징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통지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17]

---

14) 『朝鮮總督府官報』1935년 4월 16일자, "조선총독부 훈령 제14호."
15) 朝鮮神職會 編, 『朝鮮神社法令輯覽』,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37, 353-355.
16) 같은 책, 356.

총독부 학무국에서도 같은 해 10월 24일부터 3일간 각도의 학무과장과 사범학교장을 포함한 시학관들을 중앙으로 불러 회의를 갖고, "국가관념의 함양에 관한 건, 경신숭조에 관한 건, 국어사용의 보급 철저에 관한 건, 사립학교 지도 감독에 관한 건, 심전개발에 관한 건, 교화사업에 관한 건" 등을 지시하였다.[18] 평안남도 지사가 같은 해 11월 그 지역 공사립 초등학교장 회의와 중등학교장 회의를 잇달아 소집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고 실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장 회의가 끝나는 날 이들을 평양신사에 참배하게 하였으나 그들 중 기독교인 학교장들이 빠져나가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다.[19] 이어서 14일부터 개최한 중등학교장 회의에서 야스타케[安武直夫] 지사는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평양신사에 참배하고 나서 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자 숭실학교 교장 매큔(G. S. McCune, 尹山溫)과 숭의여학교 교장 대리 정익성(鄭益成), 순안 의명학교 교장 리(H. M. Lee, 李希滿)가 그런 일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상 그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20] 그 때까지 평남 도당국과 총독부는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에 대하여 설득하고 경고에 그쳤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강경책을 쓰기로 하고, 그들에게 금후 교장으로서 자신들의 신사참배 여부는 물론 학생들의 신사참배 여부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회답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회답의 내용에 따라 관련자의 학교장직 파면은 물론 학교의 강제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제가 이러한 강경책으로 나오게 된 것은 이미 1933년 만주 문제로 국제

17) 『朝鮮總督府官報』1935년 8월 10일자 및 10월 25일자 "通牒."
18) 「朝鮮」, 1935년 11월, 151-152쪽.
19) A. D. Clark, "A Study of Religion and the State in the Japanese Empir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Shrine Problem in Korea," pp23.
20) 이 사건의 경과와 일제와 선교사들이 주고받은 문서들은 『일본외무성문서』 "米一機密 제58호(1936년 4월 16일), 米人 선교사 지. 에스. 매큔의 平壤神社 불참배 문제에 관한 건"에 합철되어 있다. 이 문서는 일본외무성문서 마이크로필름 S 9220-2 『本邦神社關係雜件(1930-1946)』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문서들은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88-218쪽에 번역하여 실어두었다.

연맹에서 탈퇴하여 고립화의 길을 걸음으로써 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체명징을 강조하고 점점 파쇼화해가던 당시 일본의 시대적 조류와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와 선교사간의 분열 이간을 획책하여, 기독교계 학교에서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이를 일제의 식민지 교육체제에 완전히 편입시키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 있었다. 이러한 음모는 이 시기보다 약간 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남긴 다음과 같은 기밀 문서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 기독교 및 기독교계 학교의 취급
>
> 기독교의 종래의 포교 태도와 그 실적에 비추어 금후에는 그 만연을 저지하고 時運을 감안 고려하여 조선에서 그 포교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게 한다. 기독교 각 교파 경영의 학교에 대하여는 종교와 학교 교육을 완전히 구분해야 한다는 뜻을 누차 간절히 설유하였지만 도저히 이를 수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교육 내용에서도 皇國臣民 鍊成上 遺憾인 점이 적지 않은 실정에 비추어 점차 이를 공립학교 또는 확실한 사립학교로 접수하게 한다.[21]

즉 조선총독부의 확실한 방침은 기독교계 학교는 그 교육 내용이 "황국신민 연성상 유감인 점"이 많아 공립학교나 그들에게 순응하는 친일적인 인물이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접수하게 하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조선에서 기독교의 포교까지도 중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경한 방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신사참배의 찬반에 관해서는 일체의 토론도 경찰력까지 동원하여 금지시켰다.

이러한 일제에게 선교사측의 교섭이 먹혀 들어갈 리 없었다. 사건 당일 날로 3숭 교장이 중심이 된 이 사건에 대한 긴급전보를 받은 북장로회 선교부 실행위원장 홀드크로프트(J. G. Holdcroft, 許大殿)는 이틀 후인 11월 16일 평양에 내려와 야스타케 평남지사를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그날이 마침 토요

21) 大野綠一郎 文書, "(秘) 朝鮮에서 敎育에 관한 方策", 1937년 12월.

일 오후여서 그가 사무실에 없었고, 서울에 다시 올라가야 할 일이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돌아갔다.

> 국가 신사 의식에 참배하는 이 같은 문제는 우리 모든 학교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모든 학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학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경성에 있는 총독부 학무 당국에 우리가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권위있는 결정을 얻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론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론을 얻는 대로 각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이 나기까지는 각하께서 이미 친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있는 우리 교장들이나 우리 학교에 관한 조치를 유예하실 줄 믿습니다.[22]

그는 11월 24일에도 평양에서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의논하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국 뉴욕에 있는 선교본부에 스피어 총무를 파송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그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23] 그 다음 날 실행위원장 홀드크로프트는 베커 선교사와 함께 야스타케 평남지사를 방문하여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및 같은 학교 교장의 신사불참배문제에 관하여 학교 및 학교장 측의 정식 회답 제출을 쇼와 11(1936)년 9월경까지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같은 날로 실행위원들이 연명하여 북장로회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명의로 우가키 총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 제출하였다.

> 우리는 총독부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이 허락하는 한 어떤 식으로든 기꺼이 국가적 행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시켜

22) 홀드크로프트가 야스타케 평남지사에게 보낸 1935년 11월 16일자 편지; 김승태, 위의 자료집, 192.

23) 『매일신보』1935년 11월 27일자, "朝鮮內 基督敎界 學校 神社參拜 問題 重大化, 各地 宣敎師 聯合會에서는 米國 本部에 呼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이 기거한다고 하는 신사에 절해야 한다고 몇몇 기독교 학교 교장들에게 내린 명령에 비추어, 그리고 신들이 국가신사에서 예배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공공 신문의 잦은 보도와 관련하여, 또한 정부 간행물에까지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모호성에 비추어,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사에 양심적으로 참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성명과 명령들이 당국자들의 성명과 일본 헌법에 의해서 일본 제국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허락된 종교의 자유 보장과 조화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일을 다음 회 우리 선교회와 미국 해외 선교부 및 조선장로교회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삼가 조선총독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세 기구의 모임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선교회　　1936년 6월

조선장로회 총회　1936년 9월

이 다른 두 기구의 결의가 있은 후, 해외선교부 회의 1936년 9월

이것은 조선에서 우리 교육 사업을 계속하느냐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구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선교부의 어떤 개인도 어느 학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에 있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럴 책임이 있는 한 법률을 지키고, 모든 일본 신민에게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게 하고 싶으며, 일본제국 헌법이 허락하는 신앙의 자유 보장을 믿으며 삼가 조선 총독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1) 이 모든 기구들이 회합을 갖고 우리 미션 학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을 줄 것, 그리고

(2) 그동안 지방 관리들은 어떤 기독교 학교나 교장에게도 신사의식에 참여하도록 더 이상 압력을 행사하지 말며, 그렇게 참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학교도 처벌하지 말도록 배려할 것.

더욱이 우리는 해외선교부에 철저한 자격있는 대표를 조선에 보내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그가 조선장로교회 및 정부 당국자 그리고 모

> 든 관계자들과 충분한 회합을 갖고 1936년 10월까지는 충분한 결정에 도달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24]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 야스타케 평남지사로부터 홀드크로프트에게 학교장의 회답 연기를 거절하며 오히려 그 회답을 독촉하는 편지가 왔다. 그러자 홀드크로프트는 12월 7일 우가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 총독이나 총독부 관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선교부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인 목회자들의 자문도 받아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내도록 매큔 교장에게 권고하고, "평양학교와 관련된 상황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전보를 해외선교부에 보내기로 하며 당국자와 협상하기 위해서 로드(H. A. Rhodes, 盧解理), 솔토(T. S. Soltau, 蘇悅道), 홀드크로프트 3인을 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선임하였다. 홀드크로프트는 12월 13일 와타나베 학무국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이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매큔도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12월 13일 야스타케 평남지사에게 최종적인 회답 유보한다는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 날 홀드크로프트도 평남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12월 13일자 매큔의 편지 내용이 실행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임을 확인해 주었다. 홀드크로프트는 12월 17일에도 우가키 총독에게 12월 7일자 편지와 11월 25일자 진정서 사본을 다시 보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선교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재차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야스타케 평남지사는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의미로 매큔의 회답을 돌려보내고 12월 19일 홀드크로프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는 총독부 학무국에서도 요청하여 숭실전문학교 교장을 겸하고 있는 매큔에게 경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와타나베 학무국장은 12월 30일 북장로회 선교부 실행위원장 홀드크로프트, 위원 솔토, 숭실전문학교장 매큔을 학무국으

---

24) 실행위원들이 우가키 총독에게 보낸 1935년 11월 25일자 진정서; 김승태, 위의 자료집, 193-194쪽.

로 불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신사참배에 따르도록 설득하고 경고하였다.

> 신사는 우리 황실의 선조 및 국가에 공로있는 국민의 선조들을 봉사하여 국민으로서 숭경의 정성을 바치는 공적인 설비로서 우리 국법상 신사와 종교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 생도 아동으로서 신사에 참배시키는 것은 오로지 교육상의 이유에 기초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에 학생, 생도, 아동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경례는 애국심과 충성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종래 평안남도 지사 및 소관(小官)에게서 누차 간절히 설시(說示)한 대로이다. 근시 평양지방에서 기독교 북장로파 관계자의 사이에 사립 중등학교장의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싼 기독교의 전도 및 기독교도의 신앙생활이 평안남도청으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는다는 우려의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는 전혀 학교 교육과 종교 교육을 혼돈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신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바로써 본부(총독부)는 물론 평안남도 당국으로서도 기독교의 전도 및 기독교도의 신앙에 간섭을 시도하는 것 같은 의도는 없음을 감히 다시 논할 필요가 없는 바로서 본부 및 평안남도 당국은 기독교가 이 지방의 문화 향상에 공헌한 종래의 업적을 인정하고 만공의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종전과 같이 우리 제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중략)
>
> 이에 본부는 물론 평안남도 당국에서는 교육상의 이유에 기초하여 각 학교의 생도 아동으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시키더라도, 한 종교 신자에 대하여 그들이 신사의 본의를 이해하기에 앞서 신사참배를 권장하는 것 같은 뜻이 없다는 것은 이에 거듭 말할 필요가 없는 바이지만, 근시 평양 지방에서 북장로파 기독교 신도의 사이에 사실에 상반하여 이와 같은 잘못된 사실이 유포된 것은 최근 동 지방에서 발생한 학교에서의 신사참배 문제가 동기인 것은 위 사태에 관심을 가진 자는 모두 인정하는 바로서 도 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잘못된 인사를 불식함에 붙여 마땅한 처치를 채택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본 사안에 관심을 가진 미션 주뇌자(主腦者)에게도 속히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일반 기독교 신도의 심정에 대한 사실 무근의 불안을 제거하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 본부 학무 당국은 이에 학교 교육 및 종교에 관한 우리 국제(國制)의 경개(梗槪) 및 본부의 방침을 분명히 하여 선교사 기타로서 학교 교육에 관여하는 일부 인사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평양에 있는 본 사안에 관한 당면의 책임자인 동지 숭실학교장 윤산온 씨는 그 학교장인 책무에 비추어 당국의 의도를 양해하지 못함에 그 태도를 고치고 스스로 신사에 참배함은 물론 자기가 관장하는 학교의 생도들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시킬 의사가 있다는 뜻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의 해결이 한갓 시간만 끌어 국민교육상 악영향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일반 기독교도의 평온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동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 당국은 윤산온 씨가 끝까지 학교장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도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케 할 의사를 명시하지 않음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미리 표명함.[25]

매큔은 이미 12월 20일에 숭실학교 이사회에 교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사회는 교장으로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큔 자신도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퇴하기 보다는 파면당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야스타케 평남지사는 총독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1936년 1월 16일 매큔을 도청으로 불러들여 신사참배 여부에 대한 회답을 독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우가키 총독에게 "사립학교 규칙에 의한 학교장 인가 취소의 건 내신"이라는 공문을 보내 1월 18일자로 매큔의 숭실학교장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아울러 그의 숭실전문학교장 인가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26] 매큔이 최종 답장을 1월 18일에 보냈는데, 이미 이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숭실학교장 인가취소를 결정했을뿐만 아니라, 숭실전문학교장

---

25) 와타나베 학무국장의 "숭실학교장 윤산온 씨에 대한 경고 요지"(1935.12.30.); 김승태, 위의 자료집, 190-192쪽.

26) 「사립학교 규칙에 의한 학교장 인가 취소의 건 내신」, 인비 제15호, 1936. 1.16; 김승태, 위의 자료집, 204-205쪽.

인가 취소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큔은 1월 18일자로 신사참배를 자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시킬 수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직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는 신사의식을 단순한 교육적 애국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려는 정부의 명백한 의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실한 종교적 신념과 타협함이 없이 그것을 행하기 전에 각 개인의 양심이 확신해야 하는 문제이며, 정부 관리들도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양심에 거슬러 이것을 행하도록 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
>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정부 선언들은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에 대한 나의 양심적인 거부감을 제거하거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① 현재 봉재하고 행하는 신사의식들은 나에게는 분명히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②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실제로 거기서 신령들을 예배한다고 믿기 때문에 ③ 기독교인들은 효도와 구분하여 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④ 나도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의해 기독교인들에게 그 같은 것이 금지되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학교 교장으로서의 나에게 요구한 행위를 한 개인으로서 양심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개인으로서 신사에 참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하도록 할 수 없음도 알려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 사퇴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나의 양심은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하에서 숭실학교 교장으로 계속 있으면 정부를 당혹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미(1935년 12월 20일) 사퇴서를 학교 이사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받아 줄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
> 나는 이사회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사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점

> 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표를 각하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27]

그는 일제의 강요에 대한 분명한 항의의 표시로 신사참배를 하거나 사표를 제출하기보다는 차라리 일제로부터 파면당하는 편을 택하였던 것이다. 결국 숭실학교 교장 매큔과 숭의여학교 교장 대리 스눅(V. L. Snook)은 기독교의 교리와 양심상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참배를 시킬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함으로써 매큔은 1936년 1월 18일 숭실학교장직과 1월 20일 숭실전문학교장직 인가를 취소당하고, 스눅도 1월 22일 숭의여학교장 대리직 인가를 취소당했다. 이 문제로 3숭 교장 모두가 학교장직에서 파면된 것이다. 각 학교의 후임 교장으로는 숭실전문학교 교장에 마우리(E. M. Mowry, 牟義理) 부교장에 이훈구, 숭실학교는 교장에 정두현, 숭의여학교는 교장 사무취급으로 김승섭이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그 해 3월에 취임하였다.

총독부는 위와 같이 신사참배 거부문제로 학교장들을 파면한 후, 2월 21일자로 학무국장이 각 도지사를 통하여 기독교 각 교파 포교관리자 및 대표자에게 '신사와 종교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 일반 교역자 신도들에게까지 이를 주지시키도록 요구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신사의 봉사는 종교가 아니며, 신사참배는 전혀 국민교육상 필요에서 나온 것이므로 학교를 떠나서 개인에게 대하여 신사참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만적인 논리를 다시 펴고 있다.[28]

---

27) Letter from G. S. McCune to N. Yasutake, January 18th, 1936; 김승태, 위의 자료집, 205-207쪽.

28) 『감리회보』1936년 4월 10일자, "신사문제에 대한 통첩";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제 21호 신사와 종교에 관한 건" 및 그 부속 문서 "신사와 종교의 관계에 대하여"(1936년 2월 21일)

Ⅳ.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교육선교 철수 결의와 3숭의 폐교

신사참배 거부문제로 소속 학교 교장들이 파면당한 북장로회 선교부는 학교 이사회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후임 교장들을 임명하기는 하였지만, 소속 학교 폐교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그 해 정기 선교사 연회로 미루고 있었다. 마침내 1936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정기 북장로회 선교사 연회에서 7월 1일 '교육철수권고안'을 표결에 부쳐 69 : 16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결의하였다. 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설립시에 가졌던 충분한 목적과 이상을 보존하며 우리 선교 학교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선교회가 세속교육으로부터 철수하려는 정책을 인준해 줄 것을 권고한다.…선교회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것은 실행위원회의 권한에 맡길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29] 다만 실행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때는 각 지역 선교지부와 서로 협의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전체 선교회 연례회나 임시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선교본부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은 규정에 따라 선교본부에 보고하기로 하고 있다. 이 때 폐교하기로 결의한 북장로회 소속 학교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북장로회 선교부 소속 폐쇄 결의 학교

소재지	학교명	설립 연도	설립자	학교장	비 고
경성	경신학교	1886	H. G. Underwood	E. W. Koons	5년제 지정학교
	정신여학교	1887	A. J. Ellers	M. L. Lewis	4년제 중등 지정학교
대구	계성학교	1906	J. E. Adams	H. H. Henderson	5년제 중등 지정학교
	신명여학교	1903	Mrs. H. M. Bruen	H. E. Pollard	4년제 중등
평양	숭실학교	1897	W. M. Baird	정두현	5년제 중등

29) Educational Policy of the Chose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 S. A.(As decided July 1, 1936).

					지정학교
	숭의여학교	1903	S. A. Moffett	김승섭	5년제 중등
선천	신성학교	1906	N. C. Whittemore	장이욱	5년제 중등 지정학교
	보성여학교	1907	N. C. Whittemore	B. L. Stevens	3년제 중등

이 권고안은 미국 선교본부에 보고되어 같은 해 9월 21일 선교본부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알려지자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방침대로 학교를 폐교하자는 측과 존속시키자는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유서 깊은 학교의 폐교를 안타까워하던 지역 유지들도 자금을 모아 학교를 인수하여 계속 경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학교를 폐교하면 당장 피해를 보게 되는 학생들과 교사들도 학교를 폐교하려는 선교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점차 학교를 인계·유지하려는 측에 가담하였다.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신사참배에 응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문제가 학교를 존속시키느냐 폐교시키느냐는 문제로 변질되어 의견이 대립되었고,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인수하느냐로 의견이 갈렸다.[30] 앞에서도 서술한 대로 선교부의 '교육인퇴(敎育引退)' 즉 교육선교 철수는 일제가 원하던 바였다. 다만 그 방법에서 선교부의 재산을 일제 당국이나 그들의 조종이 쉬운 한국인에게 기증 또는 헐값에 인수시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던 선교부는 학교를 폐쇄하고 교육선교에서 철수하는 것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현장 교육을 담당하던 선교사들의 일부는 신사참배에 굴복하더라도 학교의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 일제가 바라던 대로 선교사들 자체도 분열된 것이다.[31]

1937년 9월 선교본부 회의에서는 1936년의 철수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30) 牧丹峰, "全朝鮮社會의 視聽이 總集注된 崇專 崇實 崇義 三學校 引繼 運動의 全貌," 「平壤之光」, 1937년 12월, 17-34쪽.

31) 기독교계 학교 존폐 문제를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논쟁은 당시 연희전문학교 교장이던 언더우드(H. H. Underwood)와 숭실전문학교 교장이었던 매큔(G. S. McCune) 사이의 지상논쟁이다[The Presbyterian Tribune, 53, No.8, Jan., 20, 1938, 6-11; 김승태 편,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382-389쪽].

결정하였고, 북장로회 선교부는 홀드크로프트를 비롯한 선교부 실행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학교를 폐교하고 재산을 인계하지 않는 방침을 취했다. 그러나 그러한 방침은 학교경영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반발, 일제 당국의 방해로 그대로 관철할 수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평양의 숭실전문·숭실학교·숭의여학교 세 학교만 1937년 10월 29일과 11월 1일에 각각 폐교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이들 학교들의 폐교 이유가 애매하고, 재학생 처리책이 막연하며, 기타 서식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11월 19일 폐교원을 학교 설립자에게 반려하였다.[32] 일제가 폐교원을 반려한 것은 폐교를 할 경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한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였지만,[33]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폐교의 책임을 선교사측에 전가하고, 폐교를 하더라도 부지·건물의 기부와 임대 등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선교부측도 폐교를 허락하면 건물 임대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면서, 다시 12월 2일 3숭의 폐교신청서를 평양부 학무계에 제출하여, 12월 8일에는 도 학무과에 접수되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해 도 학무당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1938년 1월 21일 3숭의 설립자측 선교사들이 선교부실행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사실을 선교본부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으면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타협이 이루어졌다.

일제 당국은 평양 3숭의 재학생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마치 그들이 시혜를 베풀 듯하면서 기독교계 학교의 폐교와 관공립학교 흡수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1) 숭실전문학교

문과 재학생 12명 농과 17명이 있는데 문과 재학생은 학력 검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다른 문과 계통 사립 전문학교에, 농과 재학생은 평안남도에서 각각 취직을 알선한다.

2) 숭실학교

32) 「매일신보」1937년 11월 20일자, "廢校認可 申請, 府經由 退却, 當局 警告를 發할 터."
33) 『조선총독부관보』1937년 7월 22일자, "조선총독부령 제90호, 사립학교규칙 개정."

쇼와 13(1938)년도 재적 생도 제3, 4, 5학년 각 2학급 계 6학급은 이를 시험 검정을 거쳐 평양 제3 공립중학교(신설)에 수용한다.

3) 숭의여학교

쇼와 13년도에 평양공립 제2고등여학교에 4학급을 증설하고 숭의여학교 쇼와 13년도 재적 생도 제3, 4, 5학년 각 2학급 계 6학급을 시험을 거쳐 각각 제2, 3, 4학년에 편입(정도가 낮을 때에는 1학년 씩 낮춰 수용) 각 1학급 계 3학급에 편성 수용하고 제1학년을 새로 1학급 모집한다.[34]

평양 3숭의 폐교 이후에도 북장로회 소속 다른 학교들은 선교회와 상관이 없는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그 지역 노회 또는 한국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겨 계속 운영하였다. 그러자 선교부 실행위원장 로드는 1938년 4월 18일 자택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폐교 문제를 다시 설명하고 100여 명의 선교사에게 서면 투표를 청하여 5월 2일 이를 개표하니 학교를 폐교하고 귀국하자는 측이 62 : 33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35] 이 결과는 비록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폐교를 반대하는 측이 증가하여 선교사간에 갈등이 심함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조선에 있던 선교사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선교본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1938년 6월 평양에서 열리는 선교사 연례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36] 이 회의에서는 학교의 존폐는 학교 당국에 맡기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나 각 학교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투표하여 교육에서 철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37] 정신을 제외한 학교

34) 大野綠一郎 文書, "(秘) 南朝鮮 및 平壤에서 外國人 私立 中等學校長의 神社不參拜問題의 經緯 및 그 후의 經過 槪要," 『제74회(1938년 12월) 법무 · 학무 · 농림 · 철도, 제국의회 설명자료 8책의 內秘』.

35) 「동아일보」1938년 5월 6일자. "北長老系 學校經營 62-33으로 撤收 決議" 이 결과는 로드가 선교본부에 보고하였는데, 5월 26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북장로회 총회는 이를 근거로 다시 한번 교육선교 철수를 결의하였다(「동아일보」1938년 6월 4일자).

36) 「동아일보」1938년 5월 14일자, "全朝鮮宣敎師總會에서 敎育引退再檢討 來月 10日頃 平壤서 開催."

37) 당시 신문에 보도된 각 안의 찬반 투표자 수는 다음과 같다. "선교총회에 제안되었던 인퇴의 원안은 오늘 드디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세전(世專)은 55 대 25, 연전(延專)은 49 대

에 대한 일체의 보조금도 이듬해 봄부터 중단하며, 소속 선교사들은 각 학교의 교직에서도 물러나기로 결의하였다.[38] 다만 그 후 한국인측의 비판과 청원에 따라 1938년 9월 북장로교 선교본부에서도 신사참배는 부인하지만 학교의 건물과 부지의 인계 문제는 좀더 완화시켰다.

V. 한국인들의 반응과 3숭 인수운동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 후부터 그때까지 묵인해 주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듬해 9월 평양 창동예배당에서 모인 제 21회 장로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한 결과 "교회 학교 학생이 신사 급 제제식에 참배하는 것과 일요일에 송영 등에 관하야 할 수 없다"고[39]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총독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차재명·유억겸·마펫(S. M. Moffett) 3인을 선출하였다. 1933년 선천에서 열린 제 22회 총회에서도 전북노회장이 "종교학교의 신사참배"에 관하여 문의하여 이 문제를 교섭위원회에 위임하였고,[40] 1934년 평양에서 열린 제 23회 총회에서도 황해노회장이 "기독교 학교 학생의 신사참배에 관한 교섭"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섭위원 차재명의 보고가 있었다.[41] 그 해 10월 총회장 이인식(李仁植) 목사의 이름으로 "기독교 신자의 자녀들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종교성 위반이니 당국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총독에게 제출하려 하였으나 총독부 사회과장에게 저지당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서를 내려하였으나 총독부 종교과 주임의 만류로 저지되었다.[42] 이와 같이 신

29, 정신(貞信)은 58 대 20으로 인퇴하기로 결정하고, 교직원의 총인퇴는 55 대 25로 인퇴키로 가결을 보았다."(「동아일보」1938년 6월 28일자)

38) 「동아일보」1938년 6월 28일자, "敎育引退 原則 可決, 延專 世專은 明年부터 引退, 貞信은 來後年에 廢校."

3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1회 회록』, 1932, 34쪽.

4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2회 회록』, 1933, 9쪽.

4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3회 회록』, 1934, 11·64쪽.

사참배에 관한 문제가 해마다 제기되자, 1935년 평양에서 열린 제 24회 총회에서는 충청노회장의 헌의로 정인과・염봉남・이인식・장규명・곽진근・이학봉・오천영 등 7인의 연구위원을 택하여 이 문제를 연구・보고케 하였다.[43]

그러던 중 앞서 살펴본 '평양 기독교계 사립학교 교장의 신사참배 거부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자, 평남 안주노회는 임시노회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학교 문을 닫을지라도 교리에 위반되는 참배를 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총회 및 산하 기독교계 학교에 통고하였다.[44] 이승길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던 평양노회도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임시긴급노회를 그 해 12월 13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노회원들에게 통지하였으나, 평양경찰서장의 집회금지명령으로 개최하지 못하였다.[45] 일제는 이 노회가 모이면 신사참배 불가를 결의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아예 이에 대한 회합과 토론도 금지시켰던 것이다.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 교장 매큔은 양심상 거리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학교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고 판단하여 이미 1935년 12월 20일 학교 이사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이사회는 매큔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그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46] 이듬해 1월 16일에는 도지사가 매큔과 원로 교장 마펫을 도청으로 불러 신사참배는 당연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실시 여부를 속히 회답하라고 독촉하였다. 매큔은 자신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고 나서 답변하겠다고 대답하고 돌아왔다. 매큔은 학교에 돌아와 교수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고, 18일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이사회에서도 신사참배불가론이 우세하였으나, 각 학교의 이사들은 학교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으므로 학교 전체로서가 아니라 학교

4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4회 회록』(부록), 1935, 119・120쪽.
4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4회 회록』, 1935, 53쪽.
44) 「조선일보」1935년 12월 4일자, "安州老會에서도 拒否 決定."
45) 「동아일보」1935년 12월 13일자, "10여 교회 대표 소환코 금지 이유를 재설명, 참배문제와 노회 경찰 양측, 개회하면 엄중 경계방침"; 「동아일보」1935년 12월 14일자, "50여 노회원이 會集해 默禱코 해산"
46) 김승태 편역,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205-207쪽.

대표자로서 신사에 참배함으로써 당국의 요구에 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학교 전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거나 대표자로서 신사에 참배케 하는 방법 중 선택은 교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매큔은 학교 대표자를 보내 신사에 참배케 하겠다고 답변하려고 하였으나, 박형룡과 주기철 등 신사참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자문을 얻은 결과 대표자를 보내 신사참배를 하는 것도 기독교 학교 전체가 굴종하는 것이 되므로 신사참배를 완전히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그렇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보냈다.[47] 그리하여 매큔 교장이 파면되자 1936년 1월 20일 숭실학교 생도들이 이에 항거하여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 시위운동은 만세를 부르며 시가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평남경찰부와 평양경찰서에서 나온 수백명의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지만, 수백명의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교가를 부르며 농성하였다.[48] 이때까지만 하여도 학교 운영을 담당한 이사회와 대다수의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로 학교 폐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숭실전문 교수단이 1936년 2월 19일 학교운영권을 한국인에게 양도하라는 결의를 하여 학교 운영자측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에는 이에 동조한 숭실전문 학생들도 강당에서 학생대회를 열고 비슷한 결의를 하여 학교경영자 대표 마펫을 찾아가 만나게 했다. 이 교수단의 결의는 다음과 같다.

> 결의
>
> 아등은 과거 40년간의 광휘있는 역사를 가진 평양숭실전문학교의 건전한 유지를 위하야 견실한 해결책을 강구한 결과 좌기와 여한 원칙적 규정을 일치 결의함
>
> 1. 아등은 평양 숭실전문학교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함.
> 1. 아등은 여하한 방법에 의하여서나 조선교육령에 의한 숭실전문학

47) 숭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숭실대학교 100년사』, 숭실대학교출판부, 1997, 489-490쪽.
48) 「朝鮮每日新聞」1936년 1월 22일자, "숭실학교생, 동맹휴교인가, 신사불참배문제로 돌연 시위운동에";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 編, 『日韓キリスト關係史資料 Ⅱ』, 東京: 新教出版社, 1995, 487쪽.

교의 영구 존속을 절대로 기함.
1. 학교 경영자측에서 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경우에는 아등은 동교의 경영권을 조선인측에 양도하기를 요구함.[49]

이 결의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렵 신사참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학교의 존폐 문제로 대치되어 학교 경영자인 선교사와 한국인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평양 3숭 경영권 인수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1936년 7월 1일 선교부 연회에서 '교육철수권고안'이 결의되고, 미국 선교본부에 보고되어 그 해 9월 21일 본부 총회에서 승인한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학교들이 속해 있는 평양노회도 '숭실이사불파견안'이 가결되어 파송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선교부가 3숭 경영에서 조만간 손을 뗄 방침이 확실해지자, 이 세 학교 이사중 고한규·정두현·김동원을 '3학교인계경영위원'으로 선임하여 인계경영 방도를 강구하고 인수자를 찾게 하였다.[50] 그러나 그 해 연말까지도 후계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1936년 12월 9일 선교부 실행위원들이 평양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12월 20일까지 후계 경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무당국에 폐교수속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자 10일 인계경영위원 3인과 숭실전문 부교장 이훈구가 선교부 실행위원들을 찾아가 조그만 기다리면 후계경영자를 결정하겠다고 폐교원을 제출하지 말도록 간청하였다.[51]

마침내 1937년 1월 15일 '3학교양도청원서(三學校讓渡請願書)'를 작성하기 위한 '인계경영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그동안 고한규·김동원은 평양 사회

49) 「기독신보」1936년 2월 26일자, "숭전, 숭중 경영을 조선인에게 양도 요구"; 「平壤每日新聞」 1936년 2월 20일자, "학교 존속 유일의 길, '신사참배'의 부르짖음, 설립자와 대항, 숭실직원단, 단호! 결의문을 발표하다."

50) 牧丹峰, "全朝鮮社會의 視聽이 總集注된 崇專 崇實 崇義 三學校 引繼 運動의 全貌," 『平壤之光』, 1937년 12월, 17-20쪽.

51) 「매일신보」1936년 12월 12일자, "각 관계자 극비 회합과 선교사만의 密議 등, 평양 숭전 숭실 숭의 三校의 후계경영 문제 긴장"

의 선배인 조만식・오윤선을 통해서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의 재단을 끌어들여 세 학교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운동을 하였고, 정두현은 평양시내의 이춘섭과 교섭하여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숭실중학교만 인수하도록 교섭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고 고한규와 김동원의 세 학교 합동경영론과 정두현의 분리경영론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일에는 숭실학부형회가 모여서 "1. 같은 북장로파 경영인 경성 대구 선천 등지의 학교는 그대로 경영하는 데 하필 평양만이 각교 경영을 폐지하려 함은 어쩐 일인가. 그대로 눌러 경영하도록 미주(미주) 북장로파 본부에 청원할 일. 2. 만약 전기 청원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때는 학교경영을 학부형측에 인계하라"는 등 몇 개항의 결의를 하고, 교섭위원들을 불러 그간 교섭의 경과 설명을 들었다.[52] 숭실전문학교 학생들도 2월 2일 학생대회를 열고 분리인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교수단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2월 4일 숭실중학교측에서도 학교직원들이 정두현 교장의 분리경영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날 그 학교 학생들도 기도회 후에 학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분리경영 지지 결의를 하였다.[53] 이제 학교의 존폐 문제는 한국인들 사이에 분리인수 경영이냐, 합동인수 경영이냐로 나뉘어 다투게 된 것이다.

이 무렵 도산 안창호까지 평양에 내려와 정두현 교장을 만나 "분리경영안을 포기하고 합동경영으로 나아와 일치 협력하여 3교(三校)를 공존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하고, 조만식・오윤선 등 평양지역 유지들도 정두현 교장을 초청하여 설득하였지만, 정두현 교장은 분리경영 즉 숭실중학교 단독인수경영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54] 그러자 2월 6일 평양의 유지 80여 명이 평양시내 동화루에 모여, '숭전・숭중・숭의 3교후계촉진회'를 조직하고 총회를

52) 「매일신보」1937년 1월 21일자, "평양 숭실, 일부 반대 학부형들도 교섭위원에 합류, 학부형회에서 오해가 일소, 인계 경영 압길 다행."

53) 「매일신보」1937년 2월 6일자, "崇實後繼問題漸紛紜, 은인자중의 태도 버려, 돌연 성명서 발표, 소신과 경위를 江湖에 공포."

54) 牧丹峰, "全朝鮮社會의 視聽이 總集注된 崇專 崇實 崇義 三學校 引繼 運動의 全貌," 『平壤之光』, 1937년 12월, 22-24쪽.

열어 정세윤을 비롯한 실행위원 11명을 선임하였다.[55] 이들은 '3교후계위원'을 찾아가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선교회 실행위원장 솔토를 찾아가 선교부의 의사를 타진하여, 합동경영의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는 2월 15일 백선행기념관에서 총회를 열어 그간 활동해온 실행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합동경영을 지지하고, 분리경영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하여 해체하였다.[56]

결국 이런 과정에서 김동원 등의 권유로 3숭을 인수경영하겠다고 약속했던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는 출자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다.[57] 그러다가 1937년 2월 말경에 숭전 교수 양주동의 교섭으로 한인보가 숭전과 숭의를 인수하겠다고 나서고, 이춘섭도 숭실중학교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모두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 1937년 3월 3일 숭실전문측 경영위원 고한규・김인준・권연호, 숭실중학측 경영위원 정두현, 숭의여학교측 경영위원 김승섭이 라이너(R. O. Reiner, 羅道來) 선교사집에 모여서 협의하여 인계청원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이 모임에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숭실중학교에 대하여는 이춘섭(李春燮) 씨가 30만 원을 내어 경영함.
> 1. 숭실전문학교와 숭의여학교에 대하여는 한인보(韓仁輔) 씨가 50만 원을 내고 따로이 숭실전문의 경상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동시에 숭실전문의 예정 기지로 기림리에 있는 과수원 4,700정보(시가 20만 원)을 제공하여 도합 70만 원의 일시 희사와 경상비의 별도 부담을 함.[58]

이러한 합의에 따라 그 날짜로 각각의 (인계) 청원서와 인수 조건을 첨부하여 국내 북장로회 선교부와 선교본부에 보냈다.[59] 여기에 각 학교 교직원

---

55) 이 때 선임된 실행위원은 11인은 다음과 같다. 강병준, 김영필, 김성업, 김익진, 노진설, 정세윤(위원장), 이기찬, 박상준(8일에 취임 불승락 통고) 최수현, 최정묵, 한근조(위의 글, 25)
56) 위의 글, 27쪽; 「매일신보」1937년 2월 17일자, "합동지지를 표명코 촉진회 解消 결의."
57) 牧丹峰, 앞의 글, 26쪽.
58) 「매일신보」1937년 3월 5일자, "숭전 숭실 숭의 3교 後繼請訓 調印 完了."

들과 학생들, 각계 저명 인사들의 청원서도 함께 첨부되어 보내졌다. 숭실전문학교 직원들이 보낸 간청서는 다음과 같다.

> 간청서
> 금반 독지 한인보 씨의 숭전·숭의 두 학교 인계 청원서 제출에 대하여 숭실전문학교 교직원 일동은 전폭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속히 인계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귀회에서 주선 노력하여 주시기를 앙망함.
> 결의
> 1. 한인보 씨의 큰 뜻과 거액 출자를 감사하며 그의 숭전 인계를 절대 환영 지지함.
> 2. 설혹 어떠한 난관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치 마시고 속히 인계가 실현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망함
> 1937년 3월 일
> 숭실전문학교 직원 일동
> 북장로선교회 실행위원회
> 북장로선교회 지방회 귀중
> 북장로선교회 미국본부
> 서명
> 모의리 이훈구 명재억 박영철 이근태 우호익 이근대 최성곤 한수철 박태준 라송덕 최윤호 이경일 김관유 촌상광지 박치우 채필근 이진호 양주동 정현구 이구화 김진세 김호식 김선명 선판순길 김준도 정두현 이효석 주중남 박영훈[60]

위의 간청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이 무렵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누가 학교를 인수하든 학교가 유지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 같다. 각계 저명 인사들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찬의서" 양식을 미리 인쇄하여 사인만 하도록 하여 보냈다.

---

59) 청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독신보」1937년 3월 17일자, "後繼請願書 全文" 참조.
60) 숭실전문학교 직원의 '간청서'; Petition of The Faculty of U. C. C., March 5, 1937.

찬의서

근반 평양의 독지 두 분의 숭전 숭실 숭의 세 학교 인계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 대해여 모두 절대의 찬의를 표하오니 속히 인계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1937년 3월 일

씨명 (인)

북장로교선교회 실행위원회

북장교회 각스테-슌회 귀중

미국북장로교 외지전도국[61]

이러한 찬의서에는 감리교 총리사 양주삼, 장로교의 채필근 등 교계의 목사와 장로, 연희전문학교 부교장 유억겸, 보성전문학교 교수 김성수 등 교육계 인사,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조선중앙일보 사장 여운형 등 언론계 인사 등 160명이 서명하였다.[62] 이러한 청원서를 받은 선교부 실행위원장 솔토는 1937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재령에서 북장로회 선교부 실행위원회를 열고, 마침 이 문제 때문에 선교본부에서 파송된 레버와 다즈도 여기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1. 在平壤 3개 학교 이사 대표자 명의로 조선인 재단에게 해당학교 등을 인계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외지전도국 총무 레버, 다즈 兩 박사와 협의하여 그들의 권고 밑에서 청원에 대한 최후적 결정은 외지전도국에서 행하도록 同局에 청원서를 제출키로 하는 동시에, 신입생은 모집치 않기로 하되 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학교의 경영은 미슌회에서 주재하기로 함.

2. 실행위원회는 평양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함으로 因하여 生할 장래의 재정상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긴급 임시 경비 2만 원을 지출하여 주도록 외지전도국에 요청키로 함.[63]

---

61) '찬의서'; Petition, March 5, 1937.

62) "찬의서 급 청원서에 서명한 인사들"(1937. 3. 5); Petition, March 5, 1937.

63) 「매일신보」1937년 3월 20일자, "숭전등 후계경영문제 대단원 目睫에 迫到."

이러한 청원은 미국 선교본부에서 곧 받아들여져 긍정적인 회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64] 그러나 본부로부터 회신이 없자, 숭전교수단은 1937년 5월 선교본부와 청주에 있던 선교부 실행위원장 솔토에게 학교후계 청원에 대한 조속한 회답을 요구하는 "전정서"와 신입생 모집을 요구하는 "간원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숭실학교 직원들도 솔토에게 신입생 모집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65] 북장로회 선교본부는 1937년 7월 초에 가서야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특별위원회에 맡겨 신중한 검토를 하여 그 해 9월 20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실행위원장 솔토에게 알려왔다. 기대에서 벗어난 이러한 답변은 선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66]

한국인들은 이와 같이 학교인수운동을 벌이는 한편, 교육철수를 반대하는 일부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부의 교육철수 방침을 철회시키고, 기독교계 학교를 계속해서 선교부에서 맡아 운영해달라는 청원운동을 하기도 했다. 특히 1937년 북장로회 선교본부에 대한 학교경영 계속청원은 1937년 7, 8월중에 기독교청년회(Y.M.C.A.)의 윤치호·구자옥을 비롯한 전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문과 국한문으로 된 성명서를 등사하여 배포하고 거기에 각자의 서명 일자, 직명, 이름을 서명하여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본부로 보냈다.

> 나는 朝鮮의 基督敎人들이 朝鮮 現況下에서 우리 基督敎主義 學校를 正當히 指導할 수 있는 줄 믿사오며 또는 在北米合衆國 北長老敎宣敎部에서는 朝鮮을 爲하야 于今껏 經營하여 나려온 敎育事業을 繼續進行하여 주시기를 衷心으로 希望하나이다.

---

64) 그 해 4월 20일경에 회답이 도착될 것으로 기대했다(「기독신보」1937년 3월 17일자, "後繼請願書 全文, 4월 20일경 회답이 도착될 듯").

65) 「기독신보」1937년 5월 19일자, "평양 3교 직원단에서 미국 선교본부와 선교사측에 陳情과 懇願書 發送."

66) 「매일신보」1937년 7월 5일자, "학수고대하던 본부회답, 其內容 空疎 無誠意" "後繼熱意 식기 바라는 工巧한 術策인가, 조선사람을 경멸함이라 하야 宣敎會 非難聲 漸高."

主降生 一千九百三十七年 月 日
職名 성명 (印)[67]

이 청원 성명의 특징은 장로교인들뿐만 아니라 양주삼・홍병선・김종우 등 감리교측 인물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고, 전국 각지의 인물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의 신사참배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기독교계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이다.[68] 또한 같은 무렵인 1937년 7월 24일 서울의 경신학교 동문회도 학교 강당에 모여 재경졸업생대회를 열고, 학교의 폐교를 절대로 반대하고, 학교를 영구히 유지해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모교에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선교회 본부에 청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69] 이 청원과 결의문은 영역되어 동창회장 이재호의 이름으로 선교본부에 보내졌다.[70]

조선총독부는 이 무렵 사립학교규칙을 개악하여, 종전에 사립학교의 폐교는 당국에 신고만하면 되게 되어 있던 것을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71] 학교 폐교의 책임을 학교측에 떠 넘기고, 폐교의 조건을 까다롭게

---

67) 이러한 청원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은 윤치호 외 78명인데 서명한 날짜는 가장 이른 것이 윤치호・구자옥의 1937년 7월 7일, 가장 늦은 것이 함흥영생고등보통학교 교원・함흥중앙교회 장로 趙鼎禹의 1937년 8월 10일자이다(C. H. Yun, "Statement," July 7th, 1937; Chung Woo Cho, "Statement," August 10th, 1937).

68) 지역별로 예를 들면, 전북의 김가전 목사(7월 20일 서명), 선천의 길종수 목사(7월 26일), 원산의 정재면 목사(7월 8일), 충남의 최지한 장로(7월 9일), 평북의 김의문 장로(7월 20일), 용천의 지군일 목사(7월 22일), 의산노회의 이보식 목사(7월 30일), 황해노회의 김경하 목사(7월 24일), 경남노회의 김길창・김만일・송창근 목사(7월 22일), 평양의 채필근 목사(7월 24일), 평북노회의 계시항 목사(7월 20일), 홍택기 목사(7월 27일), 평양노회의 강병석 목사(7월 24일), 평남노회의 강두화 목사(8월 3일), 함흥의 김관식 목사(8월 10일), 전남노회의 남궁섭 장로(8월 7일) 등이 그들이다.

69) 「동아일보」1937년 7월 24일자, "모교후계문제로 경신동문회 선교회 결의사항을 협의코자 금일 오후 동교에서 개최";「매일신보」1937년 7월 26일자, "폐교는 절대로 반대, 영구히 유지하라, 미국선교회 본부에 청원키로, 경신동문회의 결의."

70) Letter from Chai Ho Yi, August 27, 1937; Letter from Charles T. Lever to Chai-Ho, Yi, December 7, 1937.

하여 총독부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72] 앞에서 서술한대로 1937년 9월 선교본부는 교육철수 방침을 재확인하고, 더욱이 선교부 신임 실행위원장 로즈는 그 다음 달인 10월 27일에 선교본부의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어떤 학교의 소유든지 매도하지도 않고 인계하지도 않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73] 그리고 29일에는 선교부 실행위원 로즈·블레어·램프 3인의 명의로 3숭 인수청원을 한 한인보·이춘섭에게 인계를 단념할 것을 통보하였다.[74] 이미 7월 초 선교부의 태도를 핑계로 기부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가,[75] 10월 초 숭의만 인수하겠다고 번복하여 한 발 물러섰던 한인보는 그것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춘섭은 인계를 포기하지 않고 새 학교를 설립한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숭실전문학교에 대해서 한인보가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숭실전문 교우회에서 '숭전존속기성회'를 조직하고, 10월 21일 우호익 회장과 채필근·조만식·정두현 등 실행위원의 이름으로 독지가와 찬성회원을 모집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76] 그동안 숭실전문 부교장 이훈구의 교섭으로 10월 말경에 대동공업사를 운영하던 이종만(李鍾萬)이 3년간 학교 교사(校舍)를 빌려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학교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77]

그러나 선교부의 교육계의 철수와 평양 3숭 폐교방침은 확고한 것이었다.

---

71) 『조선총독부관보』1937년 7월 22일자, "조선총독부령 제90호, 사립학교규칙 개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제5조로 "사립학교를 폐지할 때는 그 사유, 생도의 처분 방법 급 폐지 기일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개정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72) 「매일신보」1937년 7월 24일자, "사립학교 규칙 개정으로 후계문제에 신해석, 폐교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

73) 「동아일보」1937년 10월 31일자, "大邱 兩校와 儆新校 3년후 引退키로 결정, 전도본부에서 결정하기까지의 經緯, 魯 선교회 위원장의 성명서."

74) 「동아일보」1937년 10월 30일자, "引繼斷念을 通牒, 미슌會에서 韓·李兩氏에."

75) 「조선일보」1937년 7월 7일자, "암담. 대숭실은 어디로! 한인보씨 70만원 기부 돌연 취소를 통고, 오늘 아침 평남도지사를 방문하고, 선교회측 태도 애매로."

76) 「동아일보」1937년 10월 24일자, "崇專存續期成會, 贊成員 百餘人士選定."

77) 「동아일보」1937년 10월 31일자, "대숭실의 新生 주인공 출현! 백이십만원의 거금 투척, 숭실전문 후계 경영, 광산과와 사범과도 신설, 혜성! 광산가 이종만씨 特志."

인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명칭만이라도 인계하기를 바랬지만, 그것마저 거부되었다.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3숭은 폐교하고,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길밖에는 남지 않았다. 남은 문제는 학교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총독부가 관여하여 선교부의 양보를 얻어냈다. 폐교 인가를 조건으로 선교부에 교사(校舍)와 시설의 임대를 압박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문제에서는 3숭 존속을 원하는 한국인들과 일제측이 한편이 되어, 기독교계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완전 폐교를 하고자 하는 선교부의 양보를 얻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양보는 그후 경신·정신을 비롯한 다른 학교들의 문제해결에 선례를 남겨 선교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없었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와 평양 3숭의 이에 대한 거부투쟁과 폐교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이제 이를 요약하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봄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일제가 메이지유신 이래 국가주의교육을 통하여 자국 국민에게 주입하였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한국병탄 이후 식민지 교육정책의 핵심이었던 "동화(同化)=일본화(日本化)=충량화(忠良化)" 정책을 기독교학교에도 강요·관철시키려던 구체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 목적으로 경영하던 기독교계 학교에는 자신들의 목적이나 신앙과 교리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고는 응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이었다. 더욱이 그것은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을 통해서 이루려다가 3·1운동의 발발로 실패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지배·장악을 위한 재시도였으며[78] 일반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

78) 김승태, "일제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학교," 「神學思想」74집, 1991년 가을호, 806-811쪽.

의 시험적 전단계이기도 하였다.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크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는 이 강요로 인한 기독교계의 분열이요, 둘째는 기독교 학교의 폐교와 선교사들의 교육선교 철수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일제가 기대했던 결과이기도 하였다. 선교사들이 그들이 경영하던 기독교 학교를 폐교하고 교육선교에서 철수하기로 결의한 것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종교탄압에 대한 분명한 항의 표시였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교육 관여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포교까지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할 계책을 세우고 있던 일제측은 그것을 오히려 환영하고 이용하였다. 더욱이 이 문제로 인한 기독교계 학교의 존폐문제를 둘러싼 선교사 내부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선교사와 한국인 사이의 불신·갈등·분열은 그들이 원하던 바였고, 전시체제라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일제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숭 폐교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첫째로 그것은 복음에 기반을 둔 기독교 교육 기관이 불의한 세속 권력의 부당한 강요를 받을 때 당연히 취해야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증거하였다. 둘째로, 신사참배에 대한 저항과 투쟁 과정에서 일제의 불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기만성과 폭력성을 깊이 체험하고 폭로하였다. 셋째로 체제 내적이라는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선교사나 선교부에 의존적이던 기독교 교육을 한국인이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해방 후 한국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독교 교육기관이 많이 출현한 것은 이러한 운동의 계승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京城日報」.「東亞日報」.「조선일보」.「每日申報」.「木浦新報」.「大坂每日新聞」(朝鮮版).
「朝鮮新聞」.「朝鮮每日新聞」.「平壤每日新聞」.「감리회보」.「기독신보」.「朝鮮」.「平壤之光」.
『朝鮮總督府官報』.『大野綠一郎文書』.『本邦神社關係雜件(1930-194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 *Korea Mission Materials of the PCUSA(1911-1954).*
阿部勳 編, 『朝鮮功勞者銘鑑』, 民衆論社, 1935.
朝鮮神職會 編, 『朝鮮神社法令輯覽』,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37.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 編, 『日韓キリスト關係史資料 Ⅱ』, 東京: 新教出版社, 1995.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숭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숭실대학교 100년사』, 숭실대학교출판부, 1997.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승태,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와 폐교 전말," 「한국근현대사연구」제14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김승태, "일제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학교," 「神學思想」74집, 1991년 가을호.
김승태, "일본신도의 침투와 1910 · 1920년대의 '신사문제'," 「한국사론」16, 서울대 국사학과, 1987.
韓亘熙, "1935-37年 日帝의 '心田開發'정책과 그 성격," 「韓國史論」35, 서울대 국사학과, 1996.